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66
----------	-------

발의연월일 : 2025. 5. 9.

발 의 자 : 장경태 · 조계원 · 채현일
조인철 · 정일영 · 이용선
문금주 · 이병진 · 서영석
민형배 의원(10인)

주 문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 사건

가. 민간 광산업체 사외이사를 겸임해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황
영식 전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후보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은폐하거나 인사검증
업무를 해태한 의혹

나. 김희선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김경규를 한국마사회장 후보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후
보자 신원검증을 생략하는 등 인사검증 절차를 위반한 의혹

2.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 사건

가. 제1호와 관련된 의혹 사건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임원인사 안건이 부당하게 의결되도록 주도한 의혹

나. 정부 예비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비 등으로 유용토록 한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무리한 감세 정책으로 세수결손 사태를 일으킨 정정훈 전 세제실장을 윤석열 정권에 조력한 대가로 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직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직에 내정되도록 돕는 등 직권을 남용해 보은성 인사특혜를 부여한 의혹

3.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 사건

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1년 이상 공석이었던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 절차를 위반한 의혹

나.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직에 김상욱 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역량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인사검증 업무를 해태한 의혹

4.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5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에 대학 동문이자 나이가 같은 검찰 출신 김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부당하게 임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 특혜를 부여한 의혹 사건

5.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의 흡결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직에 신동호 전 국민의힘 당무위원을 부당하게 임명한 의혹 사건

6.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아래에 열거하는 의혹 사건

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기록물을 은폐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장 후보에 대통령 비서실 출신 인사를 내정한 의혹

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일탈하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의혹

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부정인사 의혹 사건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의혹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부정인사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가 12.3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지시하거나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의혹 사건

8.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12.3 내란 은폐 목적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은 윤석열 내란수괴를 필두로 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에 내란 세력의 측근을 임명하거나 임명을 시도한 부정인사 사건임.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그 위원장은 다름아닌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었으며 민간위원 9명 중 과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국회는 기획재정부에 인사 심사기준과 심사과정, 임명 허부 판단의 근거 등을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한 진상규명이 요청되고 있으나, 검찰은 그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탄핵소추안 발의된 상태이며, 그 지휘·감독권자인 박성재 법무부장관마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에 대학 동문이자 동갑내기인 김영진 전 검사를 앉히는 등 부정인사 의혹을 받고 있음.

이로써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현저하다고 할 것인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당

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안을 발의하기에
이른 것임.